

# 추락 방지장치 없이 고층 작업...아슬아슬 공사현장 여전

‘아이파크 붕괴’...현장 안전불감 여전

안전모 쓴 근로자 찾아보기 힘들어  
광주·전남 지난해 25명 사망  
공사용 파이프 등 도로 침범  
보행자·주민 안전 위협도

#.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마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3층 높이의 건물 꼭대기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는 몸에 추락 방지 장치도 걸치지 않고 작업중이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서구 4층짜리 상가 건물 신축 현장.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는 노동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사다리차를 타고 3층 높이에 올라간 노동자의 몸에도 안전 장치는 갖춰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을 제지할 감독·관리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의 대규모 참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설마’, ‘괜찮을거야’라는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원칙과 기본은 뒷전으로 밀리고 회사의 미흡한 안전조치와 노동자의 단일한 안전의식까지 맞물리면서 안전 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찾아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연립주택 건축 현장의 경우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는 노동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전모를 왜 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곳저곳을 찾더니 끝내 찾지 못했다. 인근 주택재건축지역에 설치된 가림막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게 보였다. 꼼꼼하게 설치되지 않아 가림막 주변에 세워졌던 공사용 파이프 등이 도로로 침범,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의 한 상가건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사다리차 위에 올라간 근로자는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없이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한 공사현장은 행정당국 소속 점검자가 현장을 찾자, 부랴부랴 현장 주변을 정리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1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 2만 9793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노동자, 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결함기식 점검과 단일한 안전 의식,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난해 광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15명(7개 현장)이 숨졌고 전남에서는 10명(10개 현장)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추락·끼임·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239개(광주 92곳·전남 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체 2만48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조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고 가능성을 방치한 업체가 64.4%인 1만



17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연립주택 건축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목재를 건물 내부로 옮기고 있다.

3202개소에 달했다.

건설업의 위반율은 68.1%나 됐고, 제조업도 55.8%에 이르렀다.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회사보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위반도 건설업은 28.6%나 됐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의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안전불감증은 전체적인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나면 사건 처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사회 여론이 식어버리면 현장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식 기자 mskim@kwangju.co.kr

## 레미콘업체 10곳 압수수색 부실 공사 등 수사 본격화

경찰의 수사가 부실 공사 및 안전 조치 미흡 등 붕괴 사고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관련자 9명이 무더기 입건된데 이어 레미콘업체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혐의 확인에 들어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5명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감리 3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 등 6명에 대해 안전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감리 3명의 경우 현장 총 책임 감리와 건축감리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건축 감리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개인사정으로 현장을 비운 데 따라 대신 감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지난 14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49)씨를 입건한 뒤 3일 만에 입건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콘크리트 부실 타설, 제조 부실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붕괴 사고와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입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해당 아파트 신축 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한 레미콘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실 자체 납품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하청받은 업체 1곳, 펌프카(콘크리트를 실어 고층까지 타설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업체, 레미콘 업체 11곳, 현장사무소 등 총 14곳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명이 12만여곳 점검...육안으로 둘러보고 ‘이상무’

노동당국 결함기 점검

아이파크 총 10차례 점검했지만  
안전 위반 단 한건도 적발 못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정부와 노동청, 자치단체의 현장점검이 결함기식 생색내기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민 요청·민원 등으로 이뤄진 점검 결과를 내놓을때마다 “이상없다”고 했다가 정작 대형 참사가 난 뒤에는 “눈으로만 봤다”,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선별 점검을 하느라 대상에서 빠졌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동 아이파크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노동당국 등 관련기관의 안전 점검은 지난 2019년 공사 착공 이후 모두 10차례 이뤄졌지만 점검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안전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

우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한 차례 안전 점검에 나선 게 전부라는 게 정당의 강언미 국회의원 설명이다. 수백건의 주민 민원이 쏟아지는데도, 공사 시작 이후 3년 간 고작 한 차례 점검에 나섰고 이마저도 ‘이상무’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1일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불시 점검을 벌였지만 ‘물고임’ 현상만 개선토록 권고한 게 전부였다는 게 흥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6월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의 전국 18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인 점, 이번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의 충분한 양생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매뉴얼’에도 ‘콘크리트 양생의 적정 여부’, ‘콘크리트 양생 방법 및 기간’이 포된 만큼 점검단이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

서구의 점검 결과도 참담하다. 지난해만 모두 8차례 공사현장과 주변에서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안전조치·안전규정 준수 여부나 부실한 공정 진행 등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구조물(상가 및 주택) 충격, 진동, 지하수 변화 등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고작이었다. 주민 민원이 빗발쳐 이뤄진 점검임에도 콘크리트 강도 검사조차 장비가 없어 눈으로 했다는 게 서구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